



신 정부의 직업교육 개혁 추진 방향¹⁾



정 태 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생직업교육연구 실장
jungth@krivet.re.kr

고 있는 우리 나라 직업교육제도와 관련하여 신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개혁의 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신 정부가 대선 공약에서 제시한 직업교육 분야의 개혁 과제를 검토하여 정책적 기초를 살펴보고자 했다. 둘째, 신 정부의 공약 사항과 기존 정책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재검토 혹은 신중한 고려를 요하는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다. 셋째, 앞의 두 가지 내용에 기초하여 신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직업교육 개혁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1. 서론

국민의 지지와 관심 속에서 신 정부가 탄생했다. 신 정부는 지속적인 사회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 개혁의 추진이라는 사명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인적자원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신 정부가 직업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같은 문제 인식에 기초하여 이 글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운영되

2. 신 정부의 직업교육 개혁 정책 분석

가. 직업교육 개혁 공약과제의 개요

신 정부는 '자율과 다양성을 통한 희망의 교육'이라는 기치아래 교육 부문에서 10개의 대선 공약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직업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7번째 과제로, '실업계 고교-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체제의 연계 활성화를 통해 학벌사회를 능력중심사회로 전환해 나가도록 능력의 지표를 다양화' 하는 과제를 기본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 기본 과제 하에 하위 과제로 제

1) 이 글은 한국교육행정학회가 2003년 2월 5일 개최한 '2003년도 한국교육행정학회교육개혁 세미나'에서 필자가 발표한 '직업교육 개혁 과제'를 요약·재정리한 것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인적자원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신 정부가 직업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시된 내용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계 고교의 체제와 운영 개선이다. 이 과제와 관련하여 실업계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대폭 자율화하면서 산업현장과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특성화를 촉진하고, 실업계 특성화 고교의 신설을 적극 확대하며, 실업계 고교 교육을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육성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문대학 입시에서 실업계 고교 졸업자의 특별전형 확대와 실업계 고교 졸업자의 병역특례 확대와 고용촉진보조금제도의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둘째, 전문대학 체제 운영의 특성화·다양화이다. 이 과제와 관련하여서는 우선적으로 전문대학의 실습·실습교육을 통한 전공심화과정을 학점인정제와 연계하여 학제화하는 등 전문대학의 체제와 운영을 과감히 특성화·전문화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력양성을 위해 특성화된 전문직업인 양성 및 재교육·계속교육기관으로 전문대학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전문대학을 성인학습자에게 개방하여 교육대상·교육프로그램·교육연한 등을 다양화하고 이를 자격제도에 연계하여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school-to-work transition)과 '노동시장에서 학교로의 이행(work-to-school transition)' 이 순조로운 순환형 평생 교육체제 및 신지식형 직업교육체제의 중추적인 기관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전문직업인들이 학력중심사회에

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 교수의 산업체 연수학기제를 도입하여 의무화·정례화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산업체와 전문대학의 지식·정보 공유체계를 확립해 갈 것임도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문대학 내의 산학협력지원단과 교수·학습센터의 설립 등을 통한 통합적인 인프라 구축·운영 유도·지원,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학의 연계활동 강화를 위한 국가·지방자치체의 행·재정 지원 확대,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학의 산학협동 프로그램과 산업체 현장실습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해 연계된 기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 전문대학의 실기교원 채용시 최소한 2년이상 현장근무 경력의 필수화 등의 정책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셋째, 학벌차별 철폐이다. 이를 위해 취업과 자격 취득 관련 각종 시험에서 학력에 의한 자격제한 등 학력과 관련된 차별 제도를 없앨 것을 강조하였다.

넷째, 자격관리체제의 개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체제와 법체계를 통합개편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나. 직업교육 개혁 과제의 정책 기초

신 정부가 제시한 직업교육 개혁 과제의 내용은 크게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학의 체제 및 운영 개선과 자격관



리체제의 정비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들 직업교육 공약과제에는 다음과 같은 신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능력중심사회, 실력사회의 구현이다. 신 정부는 다른 정책과 함께 직업교육 개혁 과제의 실현을 통해 학벌사회를 타파하고 능력중심사회를 실현해 나갈 것을 정책의 핵심적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하여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운영 체제를 개선함으로써 이들 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산업인력이 전문능력을 갖추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다양한 성인의 직업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는 정책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취업이나 자격취득 시험 등에서 학력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실력을 갖추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표방하고 있다.

둘째, 평생학습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의 일환으로 직업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실현이다. 이를 위하여 전문 직업인 등을 포함한 성인 학습자에게 전문대학을 개방함으로써 평생교육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학교와 노동시장 간의 순조로운 이행을 지원하면서 순환형 교육체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직업교육 유관 기관 및 단체 간의 상호협력 체제 운영을 통한 직업교육의 내실화와 질 제고 추구다. 이를 위해 직업교육기관 간은 물론 이들과 산업체 간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현장지향적이고 질 높은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 정부는 직업교육·훈련과 노동시장 간의 유기적인 연계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일과 학습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학 교육의 현장성 제고를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와 교직원의 자격 강화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넷째, 직업교육관련 제도간의 연계 강화를 통한 제도 운영의 효과성 추구다. 이와 관련하여 신 정부는 직업교육제도와 직업자격제도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자격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산업인력의 양성·활용 체계를 효율화 할 것임을 밝혔다.

다섯째, 직업교육 체제의 다양화를 통한 사회의 다양성 실현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 정부는 오랫동안 2류교육으로 인식되어 왔던 직업교육의 위상을 회복하고 이를 다양화·특성화하려는 정책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실업계 고교 체제와 전문대학 교육 내용 및 활동을 다양화·자율화함으로써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할 것을 강조하고, 개인의 학습 성과도 다양하게 평가·인정해 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3. 기존 정책과의 연관성과 검토 과제

가. 기존 정책과의 연관성

직업교육 개혁은 일반교육 개혁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 하에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중요한 직업교육 정책은 연속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신 정부가 제시한 직업교육 개혁 과제는

신 정부가 직업교육 공약 과제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실행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

혹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정책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신 정부의 직업교육 개혁 정책은 [국가 인적자원개발계획](2001. 12. 17)과 연계하여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 온 직업교육 개혁 정책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일은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첫째, 신 정부가 실업계 고교-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 체제로 이어지는 연계체제의 활성화를 통해 학벌사회를 능력중심사회로 전환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기존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능력 지표를 다양화하겠다는 정책 의지는 과거 어느 정부 때 보다 진일보한 측면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학력·학벌중심사회인 우리 사회가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병폐(대학진학을 위한 사교육비 부담 문제, 사회에서는 학력·학벌로 사람의 모든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 등)를 경험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신 정부가 이 같은 정책 의지를 표방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정책의 추진을 위해 평생직업교육체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은 세계적인 추세와 맥을 같이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 구성원의 능력지표를 다양화하여 학력·학벌 이외에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능력을 소유한 국민이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는 의지는 과거 정부가 학력·학벌중심사회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했던 대안에 비해 구체성과 실효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평생학습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의 일환으

로 직업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의지는 과거 정부 때 부터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정책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는 물론 우리 나라 산업계와 노동시장의 변화 추세를 고려해 볼 때, 이 같은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은 그 필요성이 크게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 직업교육은 산업계가 원하는 인력을 양성·공급하는 기능에 주력하였으나, 이제 이러한 기능은 한계점에 직면하고 있다. 지식·정보·기술의 양 증대와 지속적인 변화,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노동시장의 인력 구조, 평생직업의 소멸과 평생 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 증대 등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 현상은 직업교육기관이 중국적 교육의 기능 수행에서 벗어나 평생교육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이 점에서 신 정부가 강조한 직업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정책은 우리 사회의 현실과 크게 부합되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보다 실효성있고 실천가능한 정책 대안을 발굴·추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신 정부가 제시한 공약과제의 여러 하위 과제는 1996년 2월 9일에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Ⅱ)] 이후로 지속적으로 계획·추진되어 온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다만, 실업계 고교 교육의 전면 무상화나 졸업자를 위한 고용촉진보조금제도 도입 등이 새로운 정책 과제로 제시되어 기존 정책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신 정부의 직업교육 개혁 과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책 추진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국가적 수준에서 수립·추진되어 왔던 직업교육 개혁 과제가 그 동안 가시적인 성과없이 신 정부의 공약과제로 다시 제시됨으로써 신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검토 과제

신 정부가 직업교육 공약 과제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실행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 혹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정책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신 정부의 직업교육 개혁 정책은 [국가 인적자원개발계획](2001. 12. 17)과 연계하여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출범과 함께 인적자원의 핵심인 사람과 지식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개발·활용하기 위한 국가 인적자원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 계획은 우리 나라 인적자원개발의 종합 계획으로 학교중심의 직업교육을 포함한 일반교육은 물론 산업계와 민간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및 훈련의 발전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이 신 정부의 몫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 정부는 이 계획에서 제시한 '평생 직업능력개발체제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직업교육 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직업교육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 정부

의 공약과제와 연관성이 많은 기존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신 정부의 공약 과제 중에서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학 교육의 개혁에 관한 많은 내용은 추진되지 않았거나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않은 채 신 정부의 공약과제로 다시 제안되고 있음을 이전에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신 정부는 공약과제의 적극 실행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나 기존의 관련 정책이 추진되지 못한 배경, 원인, 장애 요인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다양성을 갖추고 수요자를 중시하는 직업교육 체제와 제도의 운영은 필수적으로 고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공약 과제 중 일부 과제의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실업계 고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전면적인 무상교육을 추진할 것을 제시한 내용이나 학력차별 철폐를 위하여 취업이나 각종 자격시험에서 학력 제한 요소를 없앤다는 내용 등은 보다 적절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이 같은 정책은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 도출과 매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직업교육 개혁 정책과 다른 정책 간의 연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직업교육제도는 교육제도의 문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및 임금 문제, 근로 여건 문제, 근로자 복지 문제 등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회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과 연관성을 맺는 직업교육 개혁 정책이 개발·실천되어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직업교육 체제

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 원칙을 적용하였다.

첫째, 1996년 2월 9일에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직업교육 개혁 과제 중에서 성과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정책은 계속 추진의 필요성 차원에서 포함시켰다.

둘째, 신 정부가 제시한 공약과제에서 나타난 정책 기초를 반영하고 이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의 추진 방향을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지식기반사회와 평생학습사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 그간에 직업교육 분야에서 추진의 필요성이 강조된 발전 방향을 포함시켰다.

와 제도상의 현실 및 문제점만을 접근했던 과거의 방식을 지양하고, 유관 정책과의 연관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직업교육의 문제해결을 위한 범부처적 접근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정부가 1996년부터 강력하게 추진해 온 직업교육 개혁 정책이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범부처간 협력·지원 체계의 미흡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의 직업교육 개혁 정책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제도 및 정책과 연관되어 있는 직업교육의 문제를 교육인적자원부 중심으로 학교 및 교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는 한계점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과 연관을 맺는 다양한 부처가 함께 모여 직업교육 개혁과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적극 채택할 필요가 있다.

4. 직업교육 개혁 정책의 추진 방향

여기에서는 위의 내용에 기초하여, 향후 신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직업교육 개혁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 원칙

을 적용하였다. 첫째, 1996년 2월 9일에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직업교육 개혁 과제 중에서 성과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정책은 계속 추진의 필요성 차원에서 포함시켰다. 둘째, 신 정부가 제시한 공약과제에서 나타난 정책 기초를 반영하고 이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의 추진 방향을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지식기반사회와 평생학습사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 그간에 직업교육 분야에서 추진의 필요성이 강조된 발전 방향을 포함시켰다.

가. 직업자력의 발전을 통한 능력중시사회의 구축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고학력·학벌사회인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병폐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직업자격제도를 활성화시켜 많은 국민이 자격을 취득하도록 유도하고, 자격 취득에 대해 학력과 동등한 가치를 부여해 주는 국가적 차원의 능력인정체제를 구축하도록 한다.

한편 산업계의 요구가 적극 반영된 이 체제 하에서 직업교육·훈련 기관이 일관화되고 상호 연계된 기준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을 개발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직업교육·훈련제도와 산업계의 연계 강화, 각종 직업



교육·훈련 제도간의 연계 강화, 학습자의 학습 결과 이동 통로 확보 등을 추구한다.

나. 직업교육 체제의 평생교육 기능 확대

직업교육 체제를 지식기반사회와 평생학습사회로의 변화에 부응하는 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직업교육기관 간에 혹은 직업교육기관과 일반교육기관 간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교육 체제를 확대·발전시킨다. 이를 통해 학생에게 체계적으로 연계된 교육·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우수 인력의 양성·공급 기반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산업계에서는 고등학교 혹은 전문대학 졸업 근로자들이 직무능력 향상과 학위 취득을 통한 지위 향상을 위해 참여하는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기술대학을 확대·운영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학교↔노동 시장 간의 이행'을 촉진시킨다.

한편 전문대학은 다양한 계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기능을 확대하여 일반대학교와 차별화된 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킨다.

다. 산업계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는 직업교육 체제의 개편

전통적으로 수행해 왔던 기능인력 공급 기능이 지식기반사회와 평생학습사회에서 여러 측면에서 한계점에 접하고 있는 실업계 고교의 완성교육 기능을 완화시켜 기능인력 양성 기능과 계속교육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업계 고교 이외의 기능인력 양성 기관을 다원화하여 기능인력의 원활한 공급 체제를 운영하도록 한다. 그리고 실업계 고교의 계열이 새로운 산

업분류 기준과 연관성을 갖도록 재편하여 산업계와 학교체제의 연관성을 증대시키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전문대학 2년, 대학교 4년이라는 획일적인 운영 체제를 지양하고 지식기반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해 전문대학 수업 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그리고 전문대학에서 산업계의 변화에 부응하고 산업계와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직업교육의 실효성과 현장성을 지향하는 체제를 적극 지원하도록 한다.

라. 학습자의 요구와 교육 선택권을 중시하는 직업교육 제도의 다양화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생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지원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는 직업교육 체제를 운영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새롭게 출현하는 특성 있는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양성·공급 체제를 구축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재학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학생의 진로 변경 의사를 최대한 수용하여 취업 혹은 대학진학이 가능하게 하는 학교체제를 운영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중시하는 교육체제를 운영하도록 한다.

마. 직업교육제도와 자격제도의 연계 확대 및 통합적 운영

직업자격의 사회적 통용성, 현장성, 직업교육과의 호환성 등을 제고시키기 위해 직업교육제도와 자격제도를 하나의 일관화 된 표준직무기준 체제 속에서 운영하고, 이 체제 내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개발, 관리,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표준직무기준 체제 내에서 직업교육제도와 자격제도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식이나 기술을 상호 보완적으로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학습자가 소유하는 직업능력의 현장성과 적절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둘째, 표준직무기준 체제 하에서 직업교육제도와 자격제도 각자의 성과를 측정하고 양 제도간 연계제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각 제도의 효과성 제고 대책으로 연계시키고, 이들 각 제도 내에서 학습 결과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운영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직업교육제도와 자격제도는 각 제도 내에서 학습자의 선행학습의 결과를 상호 인정해 줌으로써 제도간의 호환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학습자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직업교육제도와 자격제도 간의 연계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이 실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점은행제도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격취득에 대한 학점

인정 기준을 재정비하여 이 제도의 적절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넷째, 정부는 인력의 최종 수요자인 산업계가 자격제도 운영에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산업계, 교육훈련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등의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자격제도의 운영 개선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바. 정부 정책의 종합적 접근

직업교육의 문제를 학교교육의 문제로 접근하는 정책 추진 방식을 지양하고, 일반(인문)교육과 달리 직업교육은 학교, 정부, 산업체 등의 역할 수행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의 장(場)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직업교육의 개혁 정책을 접근함에 있어서는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추진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간 협력체제와 함께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실효성 있는 협력체제를 적극 구축하도록 한다. 